

정부 출산 지원 정책에 서민·지방은 없다

신생아특례대출 '빚내서 고가아파트 사라' 수도권 위주 탁상행정
청정부지 오르는 아파트 분양가 낮추는 노력 선행돼야 효과
전남형 청년주택 등 출산율 높은 지방에 활력 넣는 정책 펼쳐야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이 정착 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도권에만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급증하는 주거 비용이 부담돼 결혼·출산을 회피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더 큰 빚을 지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분양가 공개와 토지 비용 절감을 위한 국가 지원 등의 대책과 함께, 평균 출산율을 웃돌고 전남 등이 추진하고 있는 '전남형 만원 주택'을 비롯한 효과가 입증된 지자체의 정책에 국비를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가운데 하나로 오는 29일부터 금리 1.6~3.3%의 최장 30년 만기 '신생아특례대출'을 시작한다. 지난해 말 정부는 27조원 규모의 '신생아특례대출'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대상을 2년내 출생(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한 주택 가구, 1주택 중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전용면적 85㎡(음·면은 100㎡) 이하 주택을 9억원 이하로 구매할 때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사실상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방에서는 큰 수요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지배적이다. 일단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주택 가격이 낮은데다 금리보조자리론,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금리 1~2%대의 다른 금융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서민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했을 때 30년간 매달 150만원 이상을 주거비로 부담할 수 없어 서민·지방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따라 이상급증하고 있는 아파트 거품을 우선 제거하기 위해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주장이다.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모를 키워 빚을 더 지게 하는 정부 정책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광주 지역 1㎡ 당 분양가는 548만7000원으로, 1평(3.3㎡)으로 환산하면 1794만2100원에 이른다. 34평 기준 6억996만원이다. 10년 전인 지난 2014년 12월 234만4000원(1평 773만5200원)에 비해 무려 232%가 증가했다. 특히 2020년 12월부터 3년간 48.17%가 뛰어 역대급으로 상승했다. 물가 관리를 위해 과자, 라면 등의 가격을 단속했던 정부는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아파트 분양가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홍광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사무처장은 "토지 가격과 건설비 상승, 고금리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 같은 분양가 상승은 원가에 이윤이 더해진 것으로, 지역 수요자들의 소득 수준에 비해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임은 틀림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함께 출산율이 전국 평균 0.72명보다 낮은 서울(0.54명)이 아닌 가장 높은 전남(0.95명) 등 지방에 초점을 맞춘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남도가 추진중인 전남형 만원주택, 나주시의 0원 주택 등 청년에게 주거를 사실상 무료로 제공해 지역에 정착시키려는 지자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부동산부터 출산 지원까지 최근 정부의 정책이 수도권에만 초점을 맞춰 지방은 오히려 그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아파트 분양가 공개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갑자기 급등한 아파트 가격을 낮춰 집 없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노력은 외면하면서, 대출 규모만 키워 국민 모두를 빚쟁이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문화전당 개방형 도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문화정보원 내 개방형 도서관이 쾌적하면서도 편리한 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16일 전당 도서관을 찾은 젊은이들이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책을 보고 있다. /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북한 김정은 "헌법에 '한국은 제1적대국' 명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북한이 새해 들어 대화는 끊고 대결을 향해 나아가는 절차를 거침없이 밟아감에 따라 한반도 긴장 수위가 고조되는 모양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그는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한 이상"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하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또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대화과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이들 기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광주 청년들, 빚다미에 '허덕' ▶6면

메시 같은 이강인 2골·한국, 엘로카드 비상 ▶18면



박물관 기행 - 담양우표박물관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SRT 역귀성 할인

설 연휴 기간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할인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이런 방안을 중심으로 한 교통·건설·물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이번 설 연휴 기간(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는 9일 새벽 0시부터 13일 새벽 0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한 경우 적용된다.

또 설 연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KTX에서는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도 제공한다. 국제선 항공 운량도 늘린다. 설 연휴 기간과 성수기 항공 수요 증가에 맞춰 중국·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을 주당 4600여회로 약 10% 증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Sulwhasoo
THE ULTIMATE S CREAM
NEW 설화수 진설크림